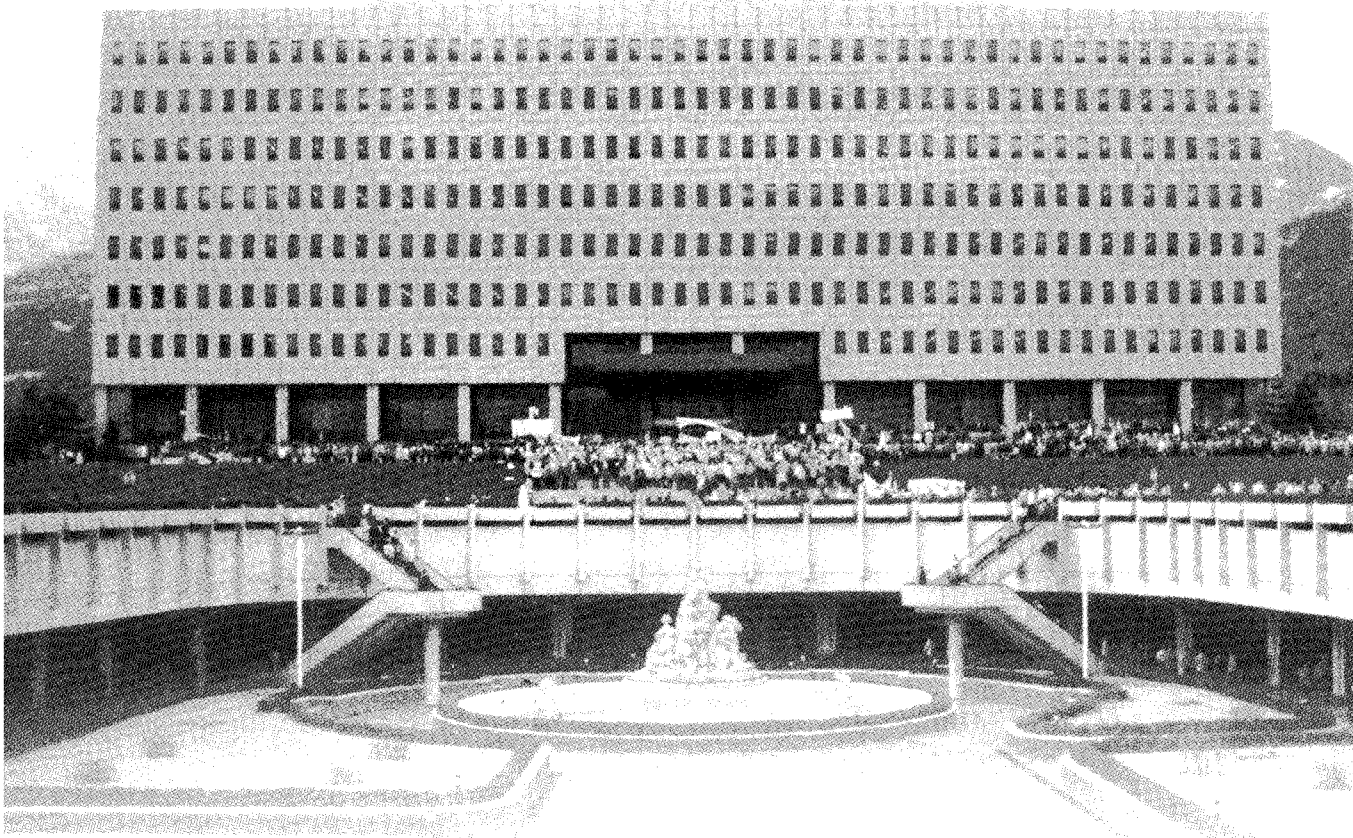


낙농종합 발전대책의 허와 실



김성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 동안 새정부가 출범하면 누더기처럼 기워진 한국 낙농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많은 낙농인들은 대선 전부터 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가 인수위가 구성되면 모든 농업문제를 비롯해 꼬일대로 꼬인 낙농문제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대한민국 낙농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임명한 농림부 장관이기에 뭔가 새로운 낙농정책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는 나올 것이라 기대 많은 낙농인들은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는 지난 3월14일 대통령 첫 농업분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낙농분야의 내용은 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낙농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판이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라는 분노와 좌절 속에 낙농인들은 이

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왜 낙농인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분노와 좌절 속에 빠져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꼬일대로 꼬인 낙농문제에 접근하는 농림부의 시각이 너무나 지엽적이고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론이 지나치게 안이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낙농인들을 더 속상하게 한 것은 농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근간으로 최근에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시안을 접하고 부터였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한마디로 낙농진흥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내년부터 쿼터제 도입과 올해 예상되는 잉여원유 감산 대책, 원유가격의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이다.

농림부는 결국 한국 낙농업의 문제는 이 세가지 대책을 시행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진흥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말이다. 물론 진흥회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전 낙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연 이 대책만으로 과연 앞으로 한국의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농림부는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우선 쿼터제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세계 선진 낙농국들이 벌써 몇십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쿼터제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상에서 원유 수급 조절을 위한 최선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84년 쿼터제를 도입한 유럽연합도 '원유 수급 조절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도 실시에 따른 행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낙농가의 소득에 가장 영향이 적은 방법은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중략) 아울러 쿼터를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라고 분석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나 낙농선진국에서 쿼터

제 실시로 원유 수급조절에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쿼터제를 실시하면 성공하리란 보장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 국가들과 우리는 현재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력한 국경보호 조치로 원유의 자급도를 분명히 하여 그 범위내에서 낙농인들에게 원유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지난 94년 WTO 농산물 협상에서 거의 모든 유제품을 낮은 관세로 개방해 버리고 말았지 않았는가.

낙농진흥회 마저도 지난해 8월 쿼터제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밝힌 바 있다. 당시 진흥회는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쿼터제가 실시되면 수요 감소에 의한 잉여 원



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진흥회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해 수요처의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해 한계 생산량을 결정함으로써 쿼터량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낙농 산업의 규모화나 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추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타인의 쿼터량을 인수해야만 규모화나 전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농 산업의 구조 조정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쿼터량의 투기화가 지나치게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 큰 문제점은 국내 쿼터량은 음용유에 국한되므로 유가공품 시장의 경우 수입 유제품에 의해 전면 잠식당하는 문제도 곧바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같은 우려는 국내 원유의 경쟁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소방안이 없다고 진흥회는 진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별 쿼터량 부여 이후 만약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단기간에 원유 공급이 곤란함으로써 수입 유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에 쿼터량 증량을 위한 소비확대 사업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국내 원유가 경쟁력이 없는데다 유제품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쿼터량은 점진적으로 감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음용유의 소비가 계속 감소할 경우 쿼터량의 감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흥회의 분석이었다.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유제품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쿼터제 실시는 자칫 잘못하다간 음용유 시장마저 잠식당함으로써 결국 낙농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진흥회는 지적했던 것이다. 특히 쿼터제 실시하에서는 농가들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전 방안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쿼터제가 실시되면 한계 생산량 때문에 젓소 도태가 불가피해 짐으로써 젓소의 산지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해진다고 분석했다.

진홍희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고 제기한 쿼터제에 대해 농림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 진홍희가 당시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로 닥친다면 농림부는 해결방안이 있는가. 만약 또다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처럼 원유 수급조절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실시한 쿼터제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그때도 낙농인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차등가격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낙농인들과 사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지금 김영진 장관은 이 제도가 확정된 것처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서울우유는 현재의 쿼터제 실시를 위해 적어도 지역 간담회

를 200번 정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터에 해당 낙농인들과 진술한 회의 한번 하지 않고 내년부터 쿼터제를 실시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원유가격 시장 경제원리 도입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동안 원유가 남아돌면 유업체 관계자들은 밥먹듯이 원유가격도 이제는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어느나라도 낙농업을 시장에 맡긴 나라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흔히 시장 경제원리를 말하면서 미국을 들먹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언뜻보기에는 미국이 원유가격을 시장에 맡겨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낙농 보호위주로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가공원료유 가격이 10파운드당 9.9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농업법을 개정, 새로운 부족불 지불제도를 만들어 한정된 양에 대해 보스톤의 음용유 가격과 16.94달러의 차액 중 45%를 보상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목표치 이하로

하회하면 정부 산하기관인 상품 신용공사를 통해 유제품을 무제한 구매한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8월1일 낙농가와 유업체의 협의와 생산비 조사결과,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공원료유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유업체가 목표가격 수준에서 지불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가격이 하회하면 정부가 무제한 유제품을 구매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현재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과거 3년간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재 가격이 하회하면 보험식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한도물량에 한해 kg당 1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 낙농국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강력한 낙농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들 나라들이 무조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어 우리가 앞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원유가격에 대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한국 낙농은 어찌될 것인가.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종합대책은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낙농인들은 지금 좌절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 712-9080